



## 세계 노사정 소식

### 미국

#### 미국 : 전미노동관계위원회, 대학 미식축구 선수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 인정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요 대학 스포츠는 학생 선수가 대학을 위해 시합에 나가고 연습을 하는 대가로 학비를 비롯한 장학금을 주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시카고 지부장인 피터 오어(Peter Ohr)는 2014년 3월 26일 노스웨스턴대학교 미식축구 선수도 대학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해, 대학-학생 선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엎었다.

오어 위원장은 노스웨스턴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미식축구 선수도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학생 선수가 미식축구 연습과 경기에 쓰는 시간(어떤 시기에는 주당 50시간에 이를)과 장학금제도 및 코치가 학생 선수에게 행사하는 통제 등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학과 학생 선수의 관계를 일종의 노사간 임금-고용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학생 선수가 '전적인 학생' 신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다.

2014년 1월 노스웨스턴대 학생 선수로부터 청원을 제출받은 NLRB는 3월까지 청문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 선수 측 변호사와 노스웨스턴대 측은 선수들을 학생으로 봐야 할지,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둘의 조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노스웨스턴대 전 미식축구 쿼터백 선수였던 케인 콜터(Kain Colter)는 학교 측이 어려운 과학 수업들을 수강하지 못하게 했으며, 의사가 되려는 그의 꿈을 좌절시켰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노스웨스턴대의 미식축구 선수 중 97%가 무사히 졸업을 하고, 또한 대학 리그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을 유지하는 등 학생 선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오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노스웨스턴대 미식축구 선수가 다른 학생처럼 공부를 위해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하기 위해 학교에 왔다는 몇 가지 예를 들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노스웨스턴대는 미식축구 경기를 통해 2억



3천 5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학업 능력이 아니라 운동 실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고 지적했다. 팀 규정에는 약물 테스트, 페이스북에서 코치의 친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학생 선수는 개강 전 훈련캠프 기간에는 주당 50~60시간, 일반 학기 중에도 40~50시간을 경기장에서 보내는데, 이는 일반적인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보다 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부에 쓰는 시간보다도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대학경기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가 주로 미식축구와 남자 농구 리그를 통해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식축구 대학리그 TV중계권은 약 73억 달러이며, 남자 대학농구 토너먼트 중계권은 현재 108억 달러 수준에서 협상 중에 있다.

이번 판결은 대학이 학생 선수에게 금전적인 보상

을 하는 방식을 NCAA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노스웨스턴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되지만, 1부 리그(Division I)에서 뛰고 있는 다른 사립대 학생 선수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주립대 등 공립대 학생선수들의 단체 교섭은 이번 NLRB의 결정이 아니라 주 법(state law)의 적용을 받는다.

노스웨스턴대 대변인 앨런 쿠배지(Alan Cabbage)는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NLRB 워싱턴 D.C. 본부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 절차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CAA는 이번 판결 대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NCAA의 최고 법률담당자 도널드 레미(Donald Remy)는 “학생 선수들을 근로자로 보는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NYT, 2014년 3월 26일자, ‘College Players Granted Right to Form Union’

## 유럽

### 독일 : 20년간 계약직 세 배 증가

무기근로계약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이었던 시대가 지나고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노동시장에 등장한 이후, 고용시장의 계약형태 분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좌파당의 질의에 기초하여 연방노동부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취약계층이 더욱 불리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계약형태가 고용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무기근로계약 이외에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과 비교해 약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3년 당시 새로운 계약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 87만 6천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약 2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 새로운 계약형태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과 외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체결되고 있는 근로계약을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약 38%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여성은 약 50%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기간제 근로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약 25%가 15~25세 연령대의 근로자이며, 14.1%가 25~35세 미만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비율이 약 두세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55~65세 연령대의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상 청년층의 불리한 지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인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약 7.9%인 것에 비해 외국인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약 14.6%로 두 배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은 저임금근로와도 연결되고 있다. 전체 근로계약 중 약 24.3%가 저임금근로에 해당하는 데 반해,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중 43.3%가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전 30% 수준이었던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013년 37%로 증가했다. 동일 회사에서 기간제 근



로계약으로 재계약을 하는 비율은 35%였으며, 나머지 28%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당 그레고어 기시(Gregor Gysi)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난 정부에게 물으면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근로자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보호제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독일의 좌파당은 독일 노동시장에서 계약직을 없애고 예전과 같이 무기계약 형태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출처: 디 벨트(Die Welt)지, 2014년 4월 6일자, ‘Meh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utschland’

**독일 : 4월 실업률 6.8%로 감소, 실업자 수도 300만 명 이하로 감소**

2014년 봄 독일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소재한 연방노동청이 2014년 4월 30일 발표한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독일의 실업자 수는 약 294만 3천 명으로, 지난달인 3월에 비해서는 약 11만 1천 명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인 2013년 4월과 비교해서도 7만 7천 명이 더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지난 3월 7.1%에서 4월에는 6.8%로 감소하며 6%대에 진입했다. 이와 같이 전월대비 실업률이 감소한 것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실업자 수가 감소한 점에 대해 연방노동청장인 프랑크-위르겐 바이제는 “양호한 경제적 기본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독일에서 봄철이 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은 특별한 경제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겨울철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 또는 관광산업 등의 산업분야의 노동시장이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금 활성화되는 것에서 주기적인 실업률 변동의 원인을 찾고 있다.

연방노동청이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적 실업인구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비활동인구를 포함하면 2014년 4월 현재 약 387만 명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수치 역시 지난 3월에 비해 약 10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는 장기실업자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결과, 독일의 장기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며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한 장기실업 상태 구직자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만 25~64세 사이 독일 전체 국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2년 2.6%로 감소했다. 지난 2008년 독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덴마크와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보다 더 높았던 반면, 2012년은 네델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IAB는 장기실업자 문제는 직업교육을 통해 해법

을 찾아야 하고,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며, 학교 졸업과 함께 직업교육을 증도에 포기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데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IAB의 전망에 따르면 예상치보다는 다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5월 실업률이 4월보다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IAB의 전문가인 엔조 베버는 슈피겔지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경기의 회복세가 이전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업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이제 연방노동청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독일의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독일과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아 그 영향이 경기에

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실상 더 큰 위험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는데,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량의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교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국가재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일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너지 수출량을 조절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출처: 1) 슈피겔(Spiegel)지, 2014년 4월 30일자, 'Frühjahrsbelebung: Zahl der Arbeitslosen fällt unter Drei-Millionen-Marke'
- 2) 슈피겔(Spiegel)지, 2014년 4월 23일자, 'Langzeitarbeitslosigkeit: Deutschland bietet wieder mehr einfache Jobs'

## 독일 : 기업 내 직업재교육에서 고령자 소외 현상

최근 독일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중소기업은 더 이상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 내 직업재교육이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고 고령자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바우만 컨설팅이 건설, 기계, 금융, 자동차, 운송, IT 및 교통업 등 총 2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

행한 직업재교육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기업의 약 3분의 2가 40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4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직업재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재교육 과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98%가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8%가 고령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직업교육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기업이 직업재교육 과정을 개설하여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안식년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바우만 컨설팅은 기업 내 직업재교육을 통한 경력의 지속과 관련해 이와 같은 기업의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과 함께 40세 이상의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4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직업적인 요구와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이 사실이지만, 경력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술 유지 또는 학업의 지속을 통한 능력 향상 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faz)지, 2014년 5월 5일자, 'Ältere Arbeitnehmer treten oft auf der Stelle'

### 독일 : 2013년 시간당 노동비용, 평균 31.7유로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유럽연합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독일의 사용자가 지불한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은 31.7유로로 확인되었다.

지난 5월 12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은 23.7유로였으며,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유럽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보다 약 8유로 높은 31.7유로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럽연합 중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가장 노동비용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시간당 노동비용이 43유로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벨기에(41.2유로), 덴마크(39.8유로), 룩셈부르크(35.6유로), 프랑스(35유로), 네덜란드(32.5유로)가 독일보다 시간당 노동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독일과 같은

31.7유로였으며, 오스트리아가 31.3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서유럽 및 북유럽에 위치한 회원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 회원국 중 시간당 노동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난 국가는 시간당 3.7유로로 확인된 불가리아였다. 독일과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7.4유로)와 체코(10.4유로)는 EU 평균보다 10유로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의 노동비용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 연합 내의 경제적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채위기 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14.1유로를 기록했고,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었던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11.5유로로 EU 평균보다 약 10유

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012년에 비해 2.1%가 상승한 것이며, 이는 1.4%가 상승한 EU 평균보다 약 0.7%포인트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9.4%로 시간당 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간당 노동비용과 함께 발표된 임금부대비용(100유로당)은 EU 평균 31유로였으며, 독일의 경우 27유로로 EU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금부대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51유로)이었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몰타(10유로)였다. 시간당 노

동비용에서는 각각 상위 3위, 4위를 기록했던 룩셈부르크와 덴마크가 임금부대비용에서는 15유로로 몰타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조사되어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 출처: 1) 슈피겔(Spiegel)지, 2014년 5월 12일자, 'EU-Vergleich: Deutsche Arbeitsstunde kostet im Schnitt 31,70 Euro'
- 2) 연방통계청(destatis) 언론보도용 자료, 2014년 5월 12일자, 'EU-Vergleich der Arbeitskosten 2013: Deutschland auf Rang sieben'

## 스위스 :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임금 도입,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8개월간 임금에 관한 국민투표가 세 차례 실시되었다. 이는 스위스에서의 빈부격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3년 2월의 국민투표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보너스에 제한하는 것이 통과되었으나, 11월에 실시된 투표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기업 최저연봉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부결된 바 있다.

2014년 5월 18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시간당 22스위스 프랑(한화 약 25,000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결과는 76%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의 요점은 스위스 복지제도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낮은 실업률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수준으로 볼 때 제도 도입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노조는 제네바나 취리히 등 물가가 높은 스위스 도시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가 주변국인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불만을

\*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표시했다. 노조는 스위스의 물가\*\*를 고려하면 한 달에 4,000스위스 프랑 이하로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대부분 숙박업이나 요식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다.

· 출처: BBC News, 2014년 5월 18일자, 'Switzerland rejects world's highest minimum wage'

\*\* 스위스 한 달 생활비: 시내 중심가 원룸 아파트 임대료 월 1,800스위스 프랑, 관리비 100~200스위스 프랑, 의료보험료 300~400스위스 프랑, 교통비 50~70스위스 프랑, 2인 외식비 100~150스위스 프랑

### 스웨덴 : 국영고용센터에 등록된 실업자 수 지속적인 감소

스웨덴 국영고용센터에 등록된 실업자 수치 및 비율이 총노동인구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구직자 수는 약 39만 3,000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8.2%에 해당한다.

이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영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인 광고 수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영고용센터의 노동시장 분석 책임자 마츠 와드만(Mats Wadman)에 의하면 이렇게 실업률이 감소하는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계층은 청년층, 최근에 국영고용센터에 등록한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자들이라고 말했다.

16~64세 사이 연령대의 노동인구 중 약 39만 3,000명이 국영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3년 동월과 비교할 때 약 22,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실업률은 8.2%로 2013년에 비해 약

0.5%포인트 감소했다. 18~24세 사이 연령대의 청년 실업률은 총노동인구의 15.6%인데, 이는 2013년 3월과 비교할 때 1.8%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2014년 3월 중 약 49,000명이 구직에 성공했는데 이는 2013년 동월과 비교할 때 약 4,000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국영고용센터에 새롭게 구직 등록을 한 구직자 수는 24,000명인데 이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4년 3월 한 달 동안 약 74,000건의 채용 공고가 국영고용센터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2013년과 비교할 때 12,000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3월 중 약 4,200명이 사전 감원 통보를 받았고, 이는 2013년 동월과 비교해 약 2,300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 출처: Arbetsförmedlingen, 2014년 4월 11일자, 'Minskning av inskrivna arbetslösa i alla län'

## 영국 : 2014년 예산안의 청년고용 지원방안 기대에 못 미쳐

조지 오스번(George Osborne) 재무장관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그룹인 시티 앤 길드(the City & Guilds)의 CEO이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인 크리스 존스(Chris Jones)는 오스번 장관이 사회초년생들과 그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존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스번 장관의 “총체적 난국”과도 같은 예산안은 이제 먼 기억처럼 보인다. 2014년 3월 예산안 발표 이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지지도는 오른 반면, 노동당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재무장관이 제시한 가장 큰 카드는 연금 개혁에 대한 공약이었다. 이는 저축에 관한 발표와 함께 고령유권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예산 편성이었다. 오스번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 잠재적인 독립당(UKIP) 지지자의 일부를 되찾고 퇴직자의 근심에 대한 공감을 포함으로써 보수당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오스번 장관은 “우리가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무역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기업인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력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오스번 장관의 예산안이 기회를 놓친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는 고령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면서 사회초년생들과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영국의 사용자들은 적임자 채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티 앤 길드 그룹(the City & Guilds Group)이 2,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결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 비해 청년 실업은 91만 2,000명에 달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사용자의 3분의 1이 영국 내의 기술 공백으로 인해 해외 기술 인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견습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8%만이 견습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번 장관은 일단 영국이 비즈니스 강국이 되면 브라질, 인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출금융 신장과 항공승객세 개혁은 이야기하면서 왜 경제회복을 이끌어갈 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는가? 왜 연금에 대한 대면상담 서비스에는 기꺼이 투자하면서 청년층의 직업상담에는 투자하지 않는가? 젊은 세대의 기술향상 없이는 영국의 비즈니스 전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오스번 장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도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새 예산안은 견습생제와 관련하여 이전 투자에 덧붙여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견습생 보조금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며 젊은 견습생을 채용하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추계보고서(Autumn Statement)에서 발표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연급납입금 인하 역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성인교육 및



의무교육 이후의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에 대한 예산 삭감 및 교육분야 축소는 기술투자를 막을 위험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16~17세 견습생에 대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계획안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교과과정과 직무경험 기회를 통해 학교시스템에 배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내일의 노동력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접근방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교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기업관련 부서와 교육관련 부서가 더 긴밀히 협조

해야 한다. 수년 동안 의무교육 이후의 계속교육과 견습생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 변화들이 있었다. 해당 시스템을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만 수정한다면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기회 역시 훼손될 것이다.

정부는 영국의 기업인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술 시스템의 발전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더 나아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 출처: 퍼스넬투데이, 2014년 3월 28일자, 'In with the old, out with the new? How the Budget failed the young'

### 영국 : 임금상승에 따라 2015년 금리 인상 전망

공식 수치가 임금동결의 종결을 예고하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2015년에는 급격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 도시조사(Treasury survey of City)를 담당한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3배 이상 올라 1.7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최저수익으로 인한 연금수급자들의 예금가치 하락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및 채무상환 의무가 있는 상당수 가계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공식 수치에 의하면, 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하여 1.6%까지 떨어진 데 비해 임금은 2월 현재 1.7% 상승했다. 이는 '생계비 위기'를 주장하며 연립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노동당의 에드 밀리반드 대표에게는 타격이 되었는데, 많은 노동당 하원의원은 다음 선거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경제대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은 최근 6년의 최고치인 72.6%까지 상승했고, 실업률은 최근 5년간의 최저치이자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금리 인상 기준보다 낮은 6.9%까지 떨어졌다.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2015년 말까지 금리가 1%로 두 배가 되거나 1.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2015년 3월이나 4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15년 5월 총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영국중앙은행은 약화된

경제를 위한 비상자금을 보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로 유지시켜 왔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와 조지 오스번 재무부 장관은 각각 고용률 증가에 따른 밝은 미래와 임금상승이 보여주는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언급한 반면,

노동당은 당의 경제정책 기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텔레그라프, 2014년 4월 16일자, 'Interest rates 'to rise sharply next year' as wages grow'

## 영국 : 4월 조기중재제도 도입 후, 주당 1,000건 신청

2014년 4월 6일, 조기중재제도(early conciliation)가 시행된 이후, 약 4,000여 명이 조기중재를 신청했다고 영국 자문·알선·조정·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가 밝혔다. 이는 평균적으로 주당 1,000건에 해당한다. 2014년 5월 6일부터 조기중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재판청구를 원하는 모든 피고용자는 재판청구에 앞서 ACAS에 먼저 의뢰해야 한다. ACAS에 따르면, 조기중재 관련 의뢰자의 98%가 합의를 위한 시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다. 1건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한 달이지만, ACAS는 첫 접수건이 24시간 내에 처리되었다고 발표했다.

조기중재제도는 재판에 드는 사용자의 비용 - ACAS에 따르면 평균 3,700파운드 - 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새로운 조기중재제도에 기반한 예비 테스트 결과, 사용자당 평균 비용은 480파운드였다. 일단 의뢰가 접수되면, ACAS는 사용자에게 접촉하

여 의뢰된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양쪽이 타협의 의지가 있으면, ACAS는 협상을 중재한다.

퍼스널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사전문가의 3분의 2가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했다. ACAS 역시 제도 시행 이후 100명의 사용자가 조기중재를 위해 ACAS에 문의해 왔다고 발표했다. 브랜던 바버 ACAS 위원장은 "조기중재가 매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 고용재판시스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ACAS는 해마다 약 80,000건을 처리했으나, 그 가운데 60,000건은 재판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접수되었다.

· 출처: 퍼스널투데이, 2014년 5월 6일자, 'ACAS receives 1,000 early conciliation applications per week'



## 프랑스 : 2014년 1분기 민간부문 일자리 23,600개 감소

2013년 4분기에 근소한 호전상태를 보였던 고용 현황이 2014년 1분기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에서 23,6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0.1% 감소), 그중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진 간접고용 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4년 5월 16일,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예측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0.3% 감소, 건설부문에서 0.4%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0.1% 감소하는 등 전 영역에서 일자리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 기간 간접고용의 감소가 전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시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에서 1분기 동안 24,9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4.6%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한 간접고용 부문은 2013년 말 호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의 하락으로 2013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나티시스(Natixis)은행의 필립프 배시터 수석 경제학자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전 분기(2013년 4분기)에 보였던 간접고용과 기업 투자 움직임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징후가 불발로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2014년 5월 15일, 2014년 1분기 경제성장이 0%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역시 0.1% 성장을 전망했지만, 예측 결과는 이러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필립프 연구원은 “이러한 예측의 변화는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전망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고용 문제 있어서는 올해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인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말 신규 일자리 창출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지난 1년간 감소한 일자리 수는 총 57,200개이다.

한편 2013년 4분기에는 2012년 초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감소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근본적으로 15,100개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한 간접고용 부문의 선전에 의한 것이었다.

· 출처: Le Monde, 2014년 5월 16일자, 'Emploi: 23 600 postes détruits au 1er trimestre, l'intérim dégringole'

## 아시아

### 일본 : 후생노동성, 고용정책기본방침 발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4년 4월 ‘고용정책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기본방침은 향후 5년간의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요 내용을 통하여 향후 일본 정부의 고용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 기본방침의 부제는 ‘일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 성장의 선순환을 지향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한 부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고용정책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본원칙은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최적의 인재 배치와 인재 활용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강화를 지향한다. 첫째,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직업능력의 가시화이다. 기업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고, 능력평가의 기준을 정비하여 직업능력의 가시화를 추구한다. 둘째, 민간인재 비즈니스, 지방공공단체, 공공직업안정소(한국의 고용센터에 해당) 등을 연계해 매칭기능을 극대화하고, 공공직업안정소별로 평가제도의 도입이나 IT 활용으로 공공직업안정소의 개혁 및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정책의 두 번째 기본원칙은 ‘전원 참가 사회’

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근로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실현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능력개발 지원, 다양한 근로형태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규직이라면 항상 잔업을 해야 한다’라는 의식과 실태를 바꾼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장시간노동 관행을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근로형태를 실현한다. 둘째, 의욕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일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재학 중에서 취업 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청년층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가모형을 구축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방식을 제공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당연한 사회를 구축한다. 그 외에 남성 근로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등을 통하여 고용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보장대상자, 생활곤란자, 독거가정, 교도소 출소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취직 지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재의 도입 및 정착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앞의 두 가지 원칙 및 방향성 외에, 개인의 성장과 의욕을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체성,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고용관리, 고용관리 정보의 공개,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산업정

책, 인력부족산업의 고용환경 개선, 지역고용기회의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4년 4월 1일자, 「雇用政策基本方針」を改正しました

### 일본 : 미츠비시도쿄UFJ은행, 계약직 근로자 7,000명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미츠비시도쿄UFJ은행에서 창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 1만 2천 명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봄에 희망자 7천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향후 새롭게 은행과 고용계약을 맺는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같은 계약직 근로자의 대규모 노조 가입은 대기업 은행 중에서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처음이다.

업계 전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이 활발해지면 회사 측에 대한 교섭력 향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고용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는 유기 고용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의 경우 현재 종업원 약 4만 8천 명 중에서 약 25%가 계약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주로 지점의 창구업무나 고객안내, 사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계약직 근로자인 지점도 있다. 은행 측은 수년간에 걸쳐 6천 명의 파견사원을 은행이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 근

로자로 전환했지만, 이들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미츠비시도쿄UFJ은행 노조는 직장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회사 측에 대한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13년 조직화 방침을 정해 3월에 조합 규약을 개정했으며, 회사 측도 조합의 방침에 이해를 표명한 상태이다.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 근로자는 매월 풀타임이 900엔, 파트타임이 500엔의 조합비를 부담한다.

지금까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은행 측과 개인적으로 협상을 해야만 했는데, 노조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은행 측은 조합의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노사협의의 통해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고용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은행과 증권회사는 경기회복과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종업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임금인상을 결정했을 때 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경영진은 “계약직 근로자도 어떠한 형태로든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식비 보조 및 복리후생 확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전체에서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그리고 계약 사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906만 명에 달하며, 이는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이들의 처우 개선은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는 2013년에 약 91만 명으로 5년동안 1.5

배 증가하였지만 조직률은 6.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의 움직임이 은행권이나 다른 산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유통이나 외식업계에서 정규직화나 임금 인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니클로는 향후 2~3년 내에 약 1만 6천 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타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사원을 단기간에 이직시키지 않고 사내에 정착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조간 1페이지, 2014년 4월 4일자, ‘契約社員7000人、組合員に、三菱UFJ、待遇改善.’

## 일본 : 생산연령인구 32년 만에 8천만 명 이하로 감소

일본 총무성이 지난 2014년 4월 15일 발표한 2013년 10월 시점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32년 만에 8천만 명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수치를 공표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은 경제성장과 일본 정부의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이나 외국인 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추계는 국세조사를 기초로 하고 매월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매년 4월에 전년 10월 시점의 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총인구에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전년(2012년)보다 116만 5천 명 감소한 7,901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1%까지 감소하였으며, 1981년 이후 32년 만에 8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 이후에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1947~1949년 출생)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년에 비해 110만 5천 명 증가한 3,189만 8천 명으로, 2005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25%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0~14세의 인구는 1,639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로 과거 최저치를 갱신했다.

정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1억 2,729만 8천 명으로 1년 동안 21만 7천 명이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3년 연속해서 20만 명을 넘어섰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가 과거 최대인 약 23만 명에 이르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인구를 일본인에 한정하면 감소폭은 25만 3천 명으로,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3만 7천 명 많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8개 행정구역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39개 행정구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26개 행정구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의 2배를 상회하였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을 보면, 미야기현의 경우에는 복구 수요와 토요타 그룹의 공장 진출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의 0.06% 감소에서 0.11% 증가로 전환되었다.

또한 후쿠시마현은 0.79%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년보다 0.62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와테현의 경우에도 0.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피해지역의 경우에도 지진 피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조간 1페이지, 2014년 4월 16일자, '生産人口8,000万人割れ、32年ぶり、65歳以上、25%超す'

### 중국 : 춘절(음력설) 이후 노동자 시위 급증

2014년 2월 초 춘절(음력설) 연휴 이후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와 항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ur Bulletin: CLB)의

'CLB's strike map'\*에 따르면, 2014년 3월에만 119건의 노동자 시위가 발생했다. 2014년 1분기에는 총 20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 CLB에서 자체 수집·정리한 데이터베이스로, 2011년 2월부터 중국 전체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CLB는 2014년 2월 "Searching for the Union: The Workers' Movement in China 2011~2013"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4월 호의 윤종석, 「중국의 노동운동 최근 동향 : 중국노동통신의 2011~2013년 보고서를 중심으로」를 참고.

동기간 대비 31%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노동자 행동주의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월마트, IBM 등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몇몇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에 집중되지만, 노동자들의 운동은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범위에서 시위와 함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노동분쟁은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1분기 전체 시위/항의의 35%를 차지했다. 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한 파업의 약 1/3은 임금체불, 그리고 약 1/4은 배상금 요구와 관련되는데, 이는 공장폐쇄 혹은 이전시에 여전히 많은 공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한 파업은 이번 분기에 상대적으로 드문데, 이는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분기 운수부문에서는 54건의 파업(전체의 26%)이 발생했고, 주로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들이 참여했다. 월마트 세 지점의 폐쇄에 대한 항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소매·서비스 부문에서도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분기 교사들이 15건의 파업을, 병원 노동자들이 13건의 파업을 일으켰다.\*\*

병원 노동자 시위가 특히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노동자들의 불만은 대개 장시간근로,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로 노조의 부재와 산업구조의 강력한 산업화 드라이브를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의 파업은 지리적으로 여전히 동남연해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4년 1분기 모든 공장 파업의 약 55%는 광둥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수·서비스부문의 파업은 중국 전역에 걸쳐 더 넓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주의 증가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반응을 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CLB의 노동자운동에 관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자 시위에 기인하는 경찰 개입과 연행 모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분기 동안, 경찰은 총분쟁의 45%에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같은 분기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였다. 덧붙여, 연행 수는 2013년 1분기의 경우 3%였지만, 2014년에는 18%로 증

\*\* 운수부문과 교사,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2011~2013년의 지속적인 경향이다. 특히 택시운전기사들은 고비용, 정부의 규제, 불공정한 경쟁 등에 맞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고, 교사들 또한 임금체불, 저임금, 정부의 학교 내 성과급 체계 도입 등에 반대하여 시위에 나섰다.

\*\*\* 중국의 경우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매우 격렬한 편이며, 심지어는 상해·살인사건도 발생하곤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 집중되면서 사설의료기관은 낙후되고 의료보험 또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의 영리 추구 등을 위한 산업화 드라이브는 이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앞서 각주 \*에서 말한 보고서를 가리킨다.



가했다.

노동자들은 또한 고용주들에 대항하여 법적 행동을 취했다. 2013년 파업으로 동관 지역 노키아에서 해고되었던 70명의 노동자들은 2014년 2월 복직을 요구하는 중재 요청을 신청했다. 또한 민주적 노조의 설립을 요구한 이후 히타치에서 해고된 노동자 Zhu Xiaomei는 2014년 4월 초 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아직 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공식적 유일합법노조인 중화전국총공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대형외자기업에서만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적극적일 뿐, 도움이 더욱 필요한 소형공장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간 노동 NGO들은 파업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 출처: 1) China Labour Bulletin, 2014년 4월 10일자, 'Worker protests in China surge after Lunar New Year'
- 2) <영국파이낸셜타임즈> 중문판, 2014년 4월 16일자, '中国一法院判处11名工人有罪'